

“尹 탄핵심판 빠르게” 국회, 선제적 자료 제출

尹측은 서류 제출 명령에도 불응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탄핵심판의 속도를 두고 한쪽은 신속히 할 것을, 다른 한쪽은 신중할 것을 주문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준비 중이다.

탄핵소추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임하는지에 관계 없이 신속하게 절차대로 주장하고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단은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수집한 계엄 관련 본회의·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자료 등 관련 자료도 선제적으로 제출했다. 현재가 윤 대통령 측에 제출을 요구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도 탄핵소추단이 나서서 제출했다.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질 경우 실시될 차기 대선 시간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관련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속도조절론으로 맞서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원 변호사는 지난 23일 “현재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며 불만을 표했고, 다음 날에는 “그런 일(대통령의 파면)을 다루는 재판은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식인 현재를 “6인의 불안정한 합의체”라고 평하며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현재가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현재가 발송하는 서류를 일절 접수하지 않고 제출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는 지난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당일 퇴근 시간 무렵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충격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판결을 통한 분위기 반전을 노리려는 의도라고 해석한다.

‘신속’과 ‘신중’이라는 상반된 주문을 받아 든 현재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짙막한 입장만을 밝힌 상태다.

현재가 양쪽의 증인 신청을 몇 명이나 받아들이는지, 사실조화·문서 송부 촉탁 등 절차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한 주에 몇 회 재판을 여는지에 따라 심판의 시간은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현재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속”과 “신중”이라는 상반된 주문을 받아 든 현재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짙막한 입장만을 밝힌 상태다.

헌재가 양쪽의 증인 신청을 몇 명이나 받아들이는지, 사실조화·문서 송부 촉탁 등 절차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한 주에 몇 회 재판을 여는지에 따라 심판의 시간은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현재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헌재가 양쪽의 증인 신청을 몇 명이나 받아들이는지, 사실조화·문서 송부 촉탁 등 절차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한 주에 몇 회 재판을 여는지에 따라 심판의 시간은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현재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헌재가 양쪽의 증인 신청을 몇 명이나 받아들이는지, 사실조화·문서 송부 촉탁 등 절차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한 주에 몇 회 재판을 여는지에 따라 심판의 시간은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현재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헌재가 양쪽의 증인 신청을 몇 명이나 받아들이는지, 사실조화·문서 송부 촉탁 등 절차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한 주에 몇 회 재판을 여는지에 따라 심판의 시간은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현재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헌재가 양쪽의 증인 신청을 몇 명이나 받아들이는지, 사실조화·문서 송부 촉탁 등 절차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한 주에 몇 회 재판을 여는지에 따라 심판의 시간은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현재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헌재가 양쪽의 증인 신청을 몇 명이나 받아들이는지, 사실조화·문서 송부 촉탁 등 절차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한 주에 몇 회 재판을 여는지에 따라 심판의 시간은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현재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헌재가 양쪽의 증인 신청을 몇 명이나 받아들이는지, 사실조화·문서 송부 촉탁 등 절차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한 주에 몇 회 재판을 여는지에 따라 심판의 시간은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현재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헌재가 양쪽의 증인 신청을 몇 명이나 받아들이는지, 사실조화·문서 송부 촉탁 등 절차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한 주에 몇 회 재판을 여는지에 따라 심판의 시간은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현재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헌재가 양쪽의 증인 신청을 몇 명이나 받아들이는지, 사실조화·문서 송부 촉탁 등 절차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한 주에 몇 회 재판을 여는지에 따라 심판의 시간은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현재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헌재가 양쪽의 증인 신청을 몇 명이나 받아들이는지, 사실조화·문서 송부 촉탁 등 절차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한 주에 몇 회 재판을 여는지에 따라 심판의 시간은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현재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헌재가 양쪽의 증인 신청을 몇 명이나 받아들이는지, 사실조화·문서 송부 촉탁 등 절차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한 주에 몇 회 재판을 여는지에 따라 심판의 시간은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현재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지원 의원 광주일보 인터뷰

“거국내각 총리 제안 받고 거절했다 尹 임기연장 속셈에 책상 치고 나와”

“국민 요구는尹 체포·격리...탄핵심판 신속히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5일 “현 정치 상황과 국민의 요구는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 수사가 우선인데, 일부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이나 거국내각 구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내란 연장이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윤 대통령 측 인사로부터 거국내각 총리직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내각제 개헌이나 거국내각 구성은 어떻게든 윤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고 자기들이 재집권을 해보려는 속셈”이라면서 “이는 내란 연장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안 하지 않았다. 제가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제안받은 장소인) 소공동 롯데호텔 귀빈실 탁자를 치고 나와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하루 빨리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긴급 체포해 세상과 격리하는 것이다”면서 “특히 지금 6인의 헌법재판소 체제를 9인 체제로 만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지체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부터 거국내각 총리직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비상계엄 사태 전에 강력하게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것 아니겠나”라고 추측했다.

박 의원은 “결국 개헌과 거국내각 제안은 내란·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음모”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 인사 중에서도 과거에 4년 중임제나 거국내각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을 끌어들이 거국내각으로 가고 개헌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는 게 저들의 작전”이라며 “이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공수처 2차 출석요구 불응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권영세(65·사진) 의원이 지명됐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며 “권영세 후보는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말했다.

또 “특히 두 차례 대선에서도 상황실장, 선거대책본부장 등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결과로 실력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권 권한대행의 인선안을 추진했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 임무를 맡게 됐다.



권 지명자는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친윤(윤석열)계 인사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은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화합, 안정, 쇄신이 필요하다”면서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뤄질 수 없다.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이다. 단합이 안 돼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 임무를 맡게 됐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 임무를 맡게 됐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 임무를 맡게 됐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 임무를 맡게 됐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 임무를 맡게 됐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 임무를 맡게 됐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 임무를 맡게 됐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 임무를 맡게 됐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 임무를 맡게 됐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 임무를 맡게 됐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 임무를 맡게 됐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 임무를 맡게 됐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 임무를 맡게 됐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 임무를 맡게 됐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 임무를 맡게 됐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 임무를 맡게 됐다.

대법 “한덕수 대행 대법관 임명, 헌법원칙 위배 아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신임 대법관 임명이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해련 의원은 “대법원은 국회의 동기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에 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답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

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